

#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도시농업과)

제출일 : 2022. 6.

## 1. 제안이유

- 기획부동산 등 투기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벗어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상위법인 「농지법」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, 시민의 의무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나.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로 정함(안 제4조)
- 다.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(안 제5조)
- 라. 2022년 8월 1일 시행(안 부칙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농지법」 제22조제3항<sup>1)</sup> 『시장에게 위임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을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』라는 규정에 따라, 제4조 농지 소유의 제한 규정은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,

1) 제22조(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)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(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
- 다만, 제5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조항은 법 제8조의3의 내용을 재기제한 것으로,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는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<sup>2)</sup>이 있으며, 부칙 제1조 조례의 시행일을 “2022년 8월 18일”로 하였는데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--

2) 법제처 의견 (2012.6.29. 회신의견12-0179) :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,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제한 경우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